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곤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08
----------	------

발의년월일: 2018. 2. .

발 의 자: 김종곤 의원

찬 성 자: 윤종욱의원, 박정기의원  
남연희의원, 김달호의원  
신동욱의원(5명)

## 1. 제안이유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기능(안 제6조 ~ 제7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안 제8조 ~ 제9조)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10조 ~ 제11조)
- 바. 위원 및 관계인의 수당 지급(안 제12조)
- 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사무 위탁(안 제13조 ~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 나.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다. 기 타: 입법예고(2018. 2. 5. ~ 2. 9.)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성동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
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관 계 법 규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제4조의2(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2. 취업직종·근로형태·근속기간·임금수준·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3. 2.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8. 2. 2. 김종곤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13.

다. 상정일자: 2018. 2. 26.

(제236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김종곤 의원

나. 제안이유

성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범위,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제5조)

-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기능(안 제6조 ~ 제7조)
-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개최(안 제8조 ~ 제9조)
- 마.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위촉 해제(안 제10조 ~ 제11조)
- 바. 위원 및 관계인의 수당 지급(안 제12조)
- 사.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사무 위탁(안 제13조 ~ 제14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다. 기 타: 입법예고(2018. 2. 5. ~ 2. 9.)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2018년 1월 기준,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955명이며 그 중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136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2% 수준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로 사료됨
- 본 제정안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짐

- 단, 향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사무 위탁 등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감안,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